

지방토론회(강원편)

달라진 위상, 높아진 책임

오늘의 언론과 중재위원회

이우세

한국프레스센터 이사장 중재위원

우리는 지금 큰 변화의 고속도로에 들어서 있다. 정치가 그렇고 경제나 사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흐름의 주역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언론을 매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언론 스스로의 변화 또한 대단하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언론의 무게는 엄청나게 커졌다. 신문·잡지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공보처 집계에 따른

「정기간행물등록현황」을 보면 일간지 74 종, 통신 2 종, 주간지 875 종, 월간지 2,241 종 등 모두 4,612 종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곧 1988년 초에 비해 일간지 44 종, 주간지 649 종 등 모두 2,200 종이 늘어난 셈이다. 언론을 생각할 때 그 양도 양이지만 그보다 더욱 살펴보는 것은 보도내용과 질일 것이다.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말은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이 시대의 기본적 흐름임이 분명해졌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 동안 허덕이던 언론이 제 길에 들어선 것이다. 한 나라언론의 수준은 그 시대 그 국민의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언론 안팎의 언론관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문의 역사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길게는 400년, 짧게는 100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인간과 언론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이이다. 이것은 곧 언론에 대한 인간의 시각이 확실해졌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근대신문의 큰 집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에서의 신문관은 분명하다. 신문은 바로 국민의 힘일 뿐 아니라 나라의 힘이기도 한 것이다.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의 황제 카이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무력이 약해 전쟁에 진 것이 아니다. 독일이 단 하나 영국의 타임즈 같은 신문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도 「나는 100만 총경보다도 석장 신문지가 더 무섭다.」고 했다. 이런 언론관이 이제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언론의 흐름에서 내용과방향도 중요하지만 기술이나 체제도 눈여겨 볼 때이다. 언론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이 달 들어 마침내 세계 최초로 시간신문까지 나오게 됐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신문은 달라질 것이며 신문이 달라짐으로써 신문의 역사는 더욱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이 없는 언론은 받침 없는 지렛대임이 틀림없다. 지난 4월 7일 제 34회 신문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신문협회가 정한 올해 신문주간의 표어는 「책임 있는 신문, 신뢰 받는 신문」이었다. 이제 언론의 자유보다는 책임에 관심을 갖고 성의를 다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도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고 언론의 기반이 튼튼해진 나라일수록 책임감은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 언론의 선진국일수록 일찍부터 윤리강령이 생기고 신문평의회가 뛰면서 공평·정확·정직이 유지되어왔다. 지금은 한 마디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대세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자유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으며

막을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대세의 경우 자칫하면 생기기 쉬운 부작용이 문제이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신문이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요즘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사이비기자」이다. 심지어 「사이비신문」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이비 기자에 대해서는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 문제가 문제인 만큼 정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공보처와 각 시·도 등 전국 55개 곳에 「사이비 기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대상을 요약하면 ① 광고 게재 강요, 또는 임의 게재 후 광고료 지불요구, ② 기업체 등의 약점을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갈취, ③ 언론사나 단체 등의 명함을 이용, 신문·책자 등 간행물 강매, ④ 기자 직위를 악용, 이권에 부당개입, ⑤ 기자 증 판매 및 무보수 고용으로 사이비 기자의 양산행위 등이다. 근년 들어 사이비 기자 집중단속을 편 이래 검찰이 적발한 것은 모두 119명으로 그 중 91명이 구속되었으며, 공보처가 신고센터를 설립하자 10일 사이에 13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언론에 의한 피해는 사이비 신문의 사이비 기자단에 의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신문의 일반 기자에 의한 기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신문에 의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 신문윤리위원회가 생긴 것은 1961년 9월이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생긴지 20년 뒤인 1981년 3월 언론중재위원회가 창립되었다. 중재위원회는 헌법에 따른 언론기본법(1980년 12월 제정)에 그 바탕을 두었다. 그 내용은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의 하나로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두어 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와 그에 불복하는 경우에 법원에 소구할 길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중재위원회가 생긴지만 9년이 지나갔다. 중재위원회는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 제도적 장치이다.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와 해당 언론사간의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합의를 성립시켜줌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두고서 언론의 보도내용을 스스로 심의하여 침해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언론사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도 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가 그들인 만큼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 뿐 아니라 기울어 질 수도 없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언론의 정도를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 청구대학 중퇴,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신문대학원 수료
- 영남일보 편집부장,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서울신문 사장, 한국신문협회회장
- 현재 한국프레스센터 이사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